

# 꼬여가는 예산 정국

### 여야 예산소위 비교섭단체 포함 놓고 이견·부총리 교체 시끌 이달까지 법정처리 시한도 빠듯... 밀실·졸속 심사 반복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예산 심의 도중 경제부총리가 교체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칼질'이라 불리는 감액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일정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총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정은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예산소위는 교섭단체인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명을 양보해 총원은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가 잡힌 12일까지 여야가 예산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예산소위 구성안 의결이 미뤄지면, 심사 일정이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예산정국 한복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된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심의 일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당은 신임 경제부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므로 김 부총리가 예산심사까지는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잘린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인가', '예산심의 기간 중 경제부총리 교체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각 상임위에서의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 속도도 더딘 상태다. 일자리 사업과 고용기금을 심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남북협력사업을 심의하는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부처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긴 상임위는 현재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도 매년 반복돼 온 '초지기 심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정부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액심사는 물론, 그 전 단계인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해 밀실에서 졸속 심사를 반복하던 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휴일이어서 여야가 이달 30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라, 물리적으로 예년보다 이틀이나 일정이 줄어 한층 더 빠듯하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국회 예결위 심사가 지연되자 결국 예산소위 위원 15명이 해운던 심사를 여야 3당 간사로 구성된 소(小)소위를 꾸려 이어갔으며, 이와 별도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쟁 항목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는 더욱이나 정부의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극이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야 '유치원 3법' 신경전

### 오늘부터 심사 본격화... 여 '조속 처리' vs 야 '졸속 안돼'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의 지원금 부정 사용 시 처벌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한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는 각 원내대표에게 '박용진 3법' 지지 서명동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다이어 올해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휴일이어서 여야가 이달 30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라, 물리적으로 예년보다 이틀이나 일정이 줄어 한층 더 빠듯하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다음 달 초 각 당의 안을 토대로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하기로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하루 앞둔 11일 이들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놓고 격돌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학부형은 물론 유치원과 교육부의 의견을 듣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졌다고 졸속으로 법안은 처리하는 것은 백년대계 교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 법안들의 기본 틀은 지켜내겠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학부형은 물론 유치원과 교육부의 의견을 듣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졌다고 졸속으로 법안은 처리하는 것은 백년대계 교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뒤숭숭' 한국당 혁신 재시동

### 금주 조강특위 전원책 후임 인선·경제정책 발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됐던 전원책 전 조강특위 특별위원을 경질하고 혁신작업에 재시동을 걸 태세다. 하지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전 위원을 '실고초려'로 영입했다가 '셀프 경질'한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데다 이번 일로 조강특위 활동 동력이 떨어져 향후 혁신작업의 순항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놓는 등 그간 비대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준비해 온 혁신작업의 성과물을 하나씩 발표할 방침이다.

11일 한국당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번 주 내로 공석이 된 조강특위 위원 한 자리의 인선을 가급적 끝내고 조강특위를 정상 가동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비대위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혁신로드맵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당협위원장 심사를 거쳐 교체·재선임 당협을 분류하는 일은 12월 중순까지 끝낸 뒤 공모를 거쳐 내년 1월 중순까지 당협위원장 정비를 끝낼 예정이다. 또, 12월 초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성정론과 평화로드맵을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하고, 이때 전 대 틀과 지도부 교체 개편 방식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중 의원총회를 거쳐 한국당표 경제정책인 '1노믹스'를 공개하고, 후속으로 남북문제와 관련한 한국당의 입장을 정리한 '평화로드맵'도

내놓는 등 그간 비대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준비해 온 혁신작업의 성과물을 하나씩 발표할 방침이다.

내놓는 등 그간 비대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준비해 온 혁신작업의 성과물을 하나씩 발표할 방침이다.

내놓는 등 그간 비대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준비해 온 혁신작업의 성과물을 하나씩 발표할 방침이다.

# 보수 2야 "정부 2기 경제팀은 코드 인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1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인사에 대해 '회전 문 코드인사'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한 관계자서 코드인사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가 질은 먹구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면 전환 능력이 매우 의심스러운 2기 경제팀을 국민께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을 중시하라는 요구에 대해, '내가 내 길 가는데 무슨 판소리냐' 하는 대답인 것"이라며 "절망스럽다"고 이번 인사를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일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좌했다"며 "또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학동문으로서 현 정권 핵심들과 밀접

손 대표는 김수현 정책실장을 향해 "부동산 위기 원조이고, 탈원전 정책주역이다. 기업으로서의 절고려운 사람"이지만 "대통령 신임이 두터운 이너서클 멤버다"라고 규정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여, 재계·노동계와 관계 재설정 고심 '투트랙 행보'

###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동참 임 실장 "노동계 약자 아니다" 과거와 달라진 인식 보여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전통적 지지기반인 노동계와의 관계 재설정을 고민하고 재계를 끌어안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 변화는 지난 5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애초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정의당이 반대해 절충점을 찾기 어려웠으나, 민주당이 당일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당 편을 들어 합의문에 포함했다. 사흘 뒤에는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민주당의 적극적인 의지가 거듭 확인됐다.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이나 전교조가 더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결단도 함께 해주어 한다"고 말하며 과거와 달라진 인식을 보여줬다.

이 같은 기류는 민주노동총련뿐 아니라 여권의 정책파트너로서 역할 해온 한국노총의 반발까지 불렀다. 이들은 민주당이 노



민주당 유튜브 채널 '쌈' 오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지하에 마련된 '쌈' 방송국에서 오픈 축하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유튜브 채널인 '쌈'을 통해 소속 의원 2인 1조 '정치수다쇼', 의원생활 관찰일지 '브이로그' 등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동계와 거리를 두는 대신 재계를 끌어안으려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당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금융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 논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이 규제 혁신 법안에 매진하는 명분은 혁신성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면서 "많은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혁신"이라고 강조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최근 민주당과 노동계 사이의 불화를 읽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연말 취업자 변동치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민주당이 재계를 향해 민생경제 회복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원하는 것(규제완화)을 해주되 사회적 책임(분배확대)도 끌어내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민주당이 큰 틀에서 노동계와 재계의 극단이 독점한 기득권을 해체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강성 노조'와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키는 '갑질 대기업'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일로 월암리, 전원주택부지 급매



- ✓ 전남 무안군 월암리 62-12, 15, 16번지
  - ✓ 임야 6000평, 도시지역 8~10M 도로 접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 ✓ 토목공사 완료, 전원주택지 최고(40채 가능)
  - ✓ 남악신도시 5분, 목포 10분, 광주 40분거리
  - ✓ 남악신도시 방향 4차선 도로 근접
  - ✓ 시세 - 42억(평당 70만원)
  - ✓ 급매 - 30억(일시불)
- 문의. 010-6834-7400

